

# 국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

에너지포커스 편집인

올해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위원회 분과 중에 갈등소통 분과라는 것이 새로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도 이러한 차원일 것이다. 물론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 미숙과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에너지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의 에너지기본계획들이 정부 주도 하에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부분 경제성장에 두어 왔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서도 가계보다는 기업이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계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면서 정부와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당사국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 미세먼지의 심각화로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에서 절대적이었던 석탄과 원자력의 역할을 일정 수준 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주역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시류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으로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시민 의식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하면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였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기대하는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정책의 설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7년 보급된 재생에너지의 42%가 시민들과 협동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난해 79TWh로 우리나라 연간 전력 소비의 15% 수준이다. 덴마크는 전력 믹스의 2/3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시민들이 참여해 설치된 것들이다. 독일과 덴마크와 비교해서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프랑스에서도 2014년에 첫 시민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이후 시민 펀드를 통해 200개 이상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 2030년까지 확충하고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약 40%를 국민들의 참여형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어 온 바와 같이 정부가 단순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지원한다고해서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 설계 및 결정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가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에너지 정책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정보산업의 발달로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미 상당히 전문적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면 그동안의 관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급전이라는 불변의 원칙으로부터도 이제는 보다 융감해질 필요가 있다.